

7. 대구광역시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장
- 제출일자 : 2019년 2월 28일
- 회부일자 : 2019년 3월 4일
- 상정일자 : 제265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2019년 3월 18일) 수정안 가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보건복지국장 백운자)

□ 제안이유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2012.6.8.시행)에 따라 현행 조례의 제명을 이에 맞춰 변경하고, 조문의 내용도 위 법률에 맞춰 전부 개정하여 상위법과의 일치를 이루고 관련 업무 처리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명 “대구광역시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노숙인 등의 사회복지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시의 책무(안 제3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

- 노숙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지원 대상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노숙인의 보호와 자립·자활·사회복귀를 위한 노숙인시설 및 주거 안정에 필요한 중간지원주택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8조)
- 노숙인 등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노숙인시설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노숙인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검토보고 요지(보고자 : 전문위원 김창업)

□ 주요 검토사항

- 현 조례의 제명을 상위법령에 맞게 “대구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한 것으로, 단순 노숙인의 보호에서 노숙인의 재활 및 자립을 통한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였고, 용어의 뜻을 법령의 규정에 따라 ‘노숙인’으로 한정했던 보호·지원 대상 범위를 ‘노숙인 등’으로 확대하여 노숙인과 쪽방생활인 등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거나,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포함하려는 것임.
- **안 제3조**는 노숙인 등의 권익 보장과 자활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사회복귀를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 사업을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추진하도록 하는 등 대구시의 책무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시행계획 및 노숙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 지원 대상 사업 등은 기존 조례의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추가하거나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 다만, **안 제4조제2항**의 ‘법 제7조제5항에 따라’와 **제3항**의 ‘법 제7조제6항에 따라’라는 문장의 내용은 뒤에 이어지는 조례안의 내용과 같아 생략하여도 되겠음.
- **안 제7조**에서 시장은 노숙인 등의 보호와 자립, 사회복지 등을 지원하기 위해 노숙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대구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8조**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주거지원)에 따라 노숙인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공동 편의시설 등을 갖춘 중간지원주택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새로 규정하였음.
-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노숙인 등 지원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 노숙인시설 지도·감독, 노숙인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 실시 등과 관련하여 조문의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거나 보완하려는 것으로,
- 다만, **안 제10조**의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에 따라’라는 문장 또한, 조례안의 내용과 같아 생략하여도 되겠음.
- **부칙 제2조**는 「대구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18.12.31. 제정·시행)에 의거 새롭게 설립되는 대구사회서비스원에서 시립희망원을 관리·운영함에 따라 기존의 「대구광역시 시립희망원설치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 검토결과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게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조문의 내용도 상위 법령에 맞게 신설하거나 일부 미비한 사항은 수정·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나 정당성 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지난해의 경우 대구시에서는 노숙인 등의 보호와 권리 증진을 위해 노숙인 상담과 시설입소, 의료·주거지원, 무료급식, 취업지원 등의 노숙인 지원(45,747건)과 생활·물품지원 등의 쪽방생활인 지원(58,398건)을 하고 있으며, 노숙인 생활시설 5곳과 이용시설 3곳 등 10곳의 노숙인 등 관련 시설을 지원(25억 8,600만원)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대구시에서 파악한 노숙인 및 쪽방생활인의 수는 974명으로 확인되나, 이는 희망원 거주자와 실제 파악되지 않은 노숙인을 포함하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전부개정을 계기로 보다 면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 노숙인이나 쪽방생활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겠음.
- 다만, 2011. 6. 7.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4차례의 일부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를 조례에 반영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으며, 향후 법령 개정이나 조례 개정 필요시 신속하게 이를 반영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복지법인 대표 한 명이 여러 시설을 관리할 경우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시설별로 대표자를 상근하게 할 수는 없는지?		인건비 지출 문제 등이 있으나, 검토해 보겠음.	

5. 토론요지

- 「대구광역시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수정내용과 같이 수정의결 할 것을 동의함.

6. 수정안 요지

- 「대구광역시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의미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제4조 제2항, 제3항과 제10조 조항 일부를 수정하였음.

7.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재석의원 전원찬성)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0. 첨부서류

- 위원회 수정안 : [붙임1]

[붙임1] 위원회 수정안

대구광역시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대구광역시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2항, 제3항 부분 중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법 제7조제6항에 따라”를 삭제한다.

제10조(지도·감독) 부분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에 따라”를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정안	수정안
<p>제4조(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p> <p>① (생략)</p> <p>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u>법 제7조제5항에 따라</u> 관계 공공기관·사회단체 및 그 밖의 민간기업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③ 제2항의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u>법 제7조제6항에 따라</u>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제4조(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p> <p>① (생략)</p> <p>② <u>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사회단체 및 그 밖의 민간기업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u></p> <p>③ <u>제2항의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u></p>
<p>제10조(지도·감독) 시장은 「<u>사회복지사업법</u>」 제51조에 따라 노숙인시설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노숙인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p>	<p>제10조(지도·감독) <u>시장은 노숙인시설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노숙인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u></p>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구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숙인 등”이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2.“노숙인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3.“노숙인시설 종사자”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4.“중간지원주택”이란 노숙인 등의 주거안정과 자립지원을 위한 주거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형태를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노숙 등을 예방하고, 노숙인 등의 권익을 보장하며, 보호와 재활·자활 지원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노숙인 등의 사회복귀 및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 시는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하여야 한다.

③ 시는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에 따라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사회단체 및 그 밖의 민간기업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을 위하여 노숙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숙인시설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대상 사업) 시장은 노숙인 등의 적절한 보호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노숙인 등의 상담 및 보호 사업
2. 노숙인 등을 위한 급식 사업
3. 노숙인 등의 응급조치·건강진단 및 재활 등 의료지원 사업
4. 노숙인 등의 자활·자립을 위한 주거안정 및 고용지원 사업
5. 그 밖에 노숙인 등의 복지증진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원 사업

제7조(노숙인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활·자립과 사회복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숙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노숙인시설 운영을 「대구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행하게 하거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중간지원주택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노숙인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공동 편의시설 등을 갖춘 중간지원주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중간지원주택 운영을 「대구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행하게 하거나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 시장은 노숙인시설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노숙인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 시장은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노숙인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시립희망원설치조례」는 폐지한다.